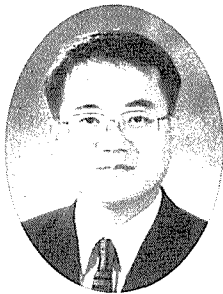


# 국가진보의 다시 찾아 한다



한 상 춘

〈 한국경제신문사 전문위원 〉



로운 천년,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있다.

새 천년에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닥칠 것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변화(mega-trend)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천년 시작과 더불어 본격화 될 뉴라운드에서는 종래에 세계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됐던 정책, 기준, 관행, 국민의 의식까지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협상개시 이후 3년 이내에 국제규범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반위에 모든 기업들이 세계경영에 열을 올릴 것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지역으로 옮겨가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연 국경개념이 약화되면서 세계=국가=기업의 등식이 형성될 것이다.

세계산업구조도 지식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기존의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급속히 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더 이상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인의 일상생활에서도 현재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현실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전자화폐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밀레니엄 변화속에 한국만이 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새 천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은 저성장·저물가·고실업·고령화로 집약되는 선진국 체질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도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되면서 경제정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혹은 기

업의 평가기준도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수익·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지식산업이 국부의 원천으로 자리잡으면서 자유와 경쟁이 경제운용 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소득도 근로자에서 지식인과 대주주로 옮겨가면서 빈부격차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제동인(經濟動因)도 조직보다는 개성과 개인이 중시되면서 솔로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천년에 대내의 경제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를 테면 밀레니엄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우리 경제의 현실은 어떤가.

IMF 체제도 끝난 것도 아닌데 각자가 제 목소리 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에 제정신을 못차리고 사회제도층은 또 다시 부패로 얼룩지고 있다.

기업들은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는 새로운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근로자들은 욕구불만으로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고질적인 한풀이성 소비가 재연되면서 해외여행이나 고급사치재 수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 마디로 자만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불과 반년도 안남은 새천년에 우리 경제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위기극복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런 기반위에 21세기에 예상되는 새로운 환경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대외정책은 세계 보편적인 질서에 적극 반응해야 한다. WTO와 같은 다자채널에 참여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이원적 전략(two-track strategy)을 세워야 할 것이다. 뉴라운드 과제도 차질없이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둘째, 대내정책은 더 이상 한국만 국한된 정책은 효용이 없어짐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조화문제에 신경써야 한다. 경제운영도 경제정책의 무력화 시대에 있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셋째, 산업 혹은 기업정책은 각종 관행과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손질하고 수확체증 시대에 맞게 지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들의 생존역량도 범위나 규모보다는 위기관리능력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정책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새 천년에 최대현안이 될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한국적인 복지시스템이 견비돼야 실업·노인문제 등 사회복지 문제를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도 함께 수립해 놓아야 한다. 정치, 사회적인 통합 뿐만 아니라 남북한 합작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상품도 개발해 놓아야 할 것이다. ☺

